

“압수수색·긴급체포…강제수사 나서라”

‘피의자 박대통령’…검찰 중간 수사 발표 광주·전남 지역민 반응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직으로서 한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이에 광주·전남지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 정서가 검찰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빼에 새겨야 한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공모관계까지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더는 오래 끌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래 끌면 국정 혼란이 지속하고 국민만 힘들어진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거국내각 또는 탄핵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승희(영암 1) 전남도의회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한 상황에서 여야는 거국내각 등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 추천문제도 야당에 전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만큼 완벽한 수사를 위해서는 빨리 강제구입해야 하고, 정치권도 나서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다

박대통령 거취 결단 촉구
정치권 탄핵 절차 요구
“롯데 70억 뇌물죄 기소감”

읍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어떻게 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지 교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철저하고 명확한 ‘신상발발’(信賞必罰) 원칙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 측의 스포츠계 ‘농단’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지부 부지부장)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저지른 범죄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정 부분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적용 죄명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는 실속없이 국민에게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죄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롯데그룹에 대한 추가 출연금 70억원의 최소한 강요죄와 강요미수죄가 아니라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향후 검찰수사나 별도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더 규명해서 추가기소해야 한다. 이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774억원 강제 모금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 민주광장 10만 시국촛불
지난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시국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학 호남진흥원 내년 하반기 문 연다

국회 상임위 설계비 반영
법인 설립 주민의견 수렴
초기 출자 6억 시·도 분담

국학 관련 문집과 고문서, 서화 등 호남권에 산재한 한국학 문화유산을 관리·연구하기 위한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이 첫 단추를 끼웠다.

최근 재단법인 설립 추진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도 진흥원 건립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운영을 맡을 재단법인 설립의 첫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무실은 진흥원 건립 이전까지 광주시공무원연수원에 들어서며 초기 출자자본 6억원의 시도가 내기로 했다.

호남권 상생 의제의 하나였지만 애초 참여하기로 한 전북도가 빠짐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만 함께한다.

호남진흥원 설립은 10여년전부터 지역 학자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장중인 국학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2011년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비롯됐다.

광주시는 2014년 1월, 진흥원 목적과 법인 설립·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출원, 보고, 감사 등 설립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뒷받쳤다.

재단 설립은 주민 의견 수렴 뒤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등기, 발기인 총회, 조직구성을 거쳐 내년 하반기 문을 열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한국학 관련 사료 발굴과 관리, 자료관 운영, 학술연구 및 교육, 호남학 관련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민간 연구조직 지원과 컨설팅, 홍보 등을 맡게 된다.

설립 초기에는 사무국과 총무부, 자료연구부 등 1국 2부 체제(18명)로 출범한 뒤 장기적으로 2국 4부 체제(50명)로 확대한다.

법인 설립 뒤 170억원을 들여 행정동, 연구동, 수장고 등을 갖춘 진흥원 건물을 건립하고 지방비 300억원을 출연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인 설립 뒤에도 진흥원 건립을 위한 재원이나 입지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호남에는 옛 선비의 문집과 지방문 20여만권과 고문서 15만점, 고서화, 고목판 등 모두 52만여점의 사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리 체계가 일정하지 않고 개인, 문중, 기관이 소장한 고문헌 등은 훼손되는 등 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흥원 설립은 시도 상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이번엔 첫 단추를 꿴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에서도 실시설계비 2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권철기자 cki@kwangju.co.kr

3주째…박 대통령 지지율 5% 고착

호남 0%…새누리 2%P 하락 15% 국민의당 14%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영향으로 3주째 역대 최저치인 5%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17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로, 전주와 같았다. 11월 들어 3주 연속 역대 최저치

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4%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대구·경북(TK)에서도 4%포인트 하락한 5%에 그쳤다. 충청에서는 11%로 다소 올랐으나 호남에서는 3주째 ‘제로(0) 지지율’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지지율이 1%였고, 30대에서는 0%를 기록했다. 40대는 4%,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이 전주와 같은 31%를 기록해 수위를 지켰으며, 새누리당은 2%포인트 추가 하락한 15%, 국민의당은 1%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6%로 등락이 없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이며, 전신인 한나라당 지지도 최저치와도 동물이다. 특히 최근 잇단 하락세로 인해 3위인 국민의당에 추격당하며 2위 자리마저 내줄 위기에 놓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기춘 50% 할인 받고 日차병원서 면역세포치료

정부 차병원 특혜 의혹 확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차병원(일본TCC)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은 것으로 지난 18일 확인됐다.

또 김 전 실장은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4분의 1만 지불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50% 가량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가 면역세포 배양을 통한 세포치료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일본에서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

차음의원은 김 전 실장의 치료에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 정부로부터의 특혜의혹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면역치료는 보건당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한 면역세포치료제를 사용할 때만

합법이다. 자가면역 세포 배양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동모 차음의원 원장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은 차음의원이 아닌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차병원 관계자 역시 “김 전 실장이 차음의원에는 지난해 3월께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줄기세포치료 같은 건 받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면역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면역세포는 줄기세포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이물질, 바이러스 등에 대항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NK세포(자연살해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등이 있다.

면역세포치료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한

뒤 배양하고, 배양한 세포를 다시 암 환자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체내 면역체계 자체를 자극해 암세포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김 전 실장이 일본까지 건너가 면역세포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약사법에서는 시판된 면역세포치료제 외에 다른 세포 배양이나 치료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차병원그룹은 김 전 실장의 진료비 지불과 관련해 “개인정보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4분의 1 정도 진료비를 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당시 김 전 실장이 50% 정도 할인을 받았다”고 최종 확인했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